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대출금리 상승이 가계 재무건전성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

목 차

■ 대출금리 상승이 가계 재무건전성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

Executive Summary	i
1. 개 요	1
2. 가계부채 및 가계의 재무건전성 현황	2
3. 대출금리 상승이 가계 재무건전성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	5
4. 시사점	9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경 제 연 구 실 : 신 유 란 연 구 원 (2072-6240, yooran0111@hri.co.kr)

Executive Summary

□ 대출금리 상승이 가계 재무건전성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

■ 개요

가계부채는 저금리 지속에 따른 유동성 확대와 부동산시장 호조를 바탕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최근 미국이 정책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 간 정책금리차 축소로 인해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 증가 및 이로 인한 가계 소비지출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출금리 상승이 가계의 재무건전성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 가계부채 및 가계의 재무건전성 현황

최근 가계부채는 상대적으로 금리수준이 높은 비은행권 대출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향후 대출금리 상승 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가계 전체의 부채상환여력은 양호한 수준이나,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경우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및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이 증가하는 추세로 채무상환부담이 커지고 있다. 또한 유동성기준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 한계가구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며, DSR이 증가하여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었고, 청산기준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 고위험가구의 경우 최근 DSR이 크게 높아진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금리상승 충격 발생 시 위험가구인 한계가구와 고위험가구를 중심으로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대출금리 상승이 가계 재무건전성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

1) 대출금리 상승 충격으로 인한 가계 재무건전성 악화

현재 상대적으로 금리수준 및 변동성이 높은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기준금리 1%p 인상 시 대출금리가 최대 3%p까지 상승할 수 있음을 가정하였다(2016년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이후 저점을 기준으로 2016년 12월 미국 정책금리 인상 후 2017년 1월 예금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미 정책금리 인상폭의 2배 가까이 상승, 저축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4배 가까이 상승).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상태에서 대출금리가 각각 1%p, 3%p 상승할 경우 이자비용 증가로 인한 가계의 재무건전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출금리가 1%p, 3%p 상승할 경우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DSR이 38.7%에서 40.4%, 43.9%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가구의 경우 DSR은 127.3%에서 130.6%, 134.0%로 증가, 고위험가구의 경우 DSR은 200.5%에서 211.6%, 223.3%로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한 가구를 중심으로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이들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되면서 실물시장으로 위협이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 금리충격 발생 시 가계 재무건전성 변화 >

(단위: 만 원, %)

		base	+1%p	+3%p
금융부채 보유가구	가구당 이자비용	308	364	476
	DSR	38.7	40.4	43.9
한계가구	가구당 이자비용	803	913	1,135
	DSR	127.3	130.6	134.0
고위험가구	가구당 이자비용	772	854	999
	DSR	200.5	211.6	223.3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계산.

주 : 가구당 이자비용은 이자비용 총액을 가구수로 나눈 값이며, DSR은 가구 전체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

2) 소비에 미치는 영향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비용 증가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원리금상환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가계는 소비지출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소비지출로 연결되지 못할 경우 소비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가계 발 금융위기인 2003년 신용카드 부실사태와 비교해 볼 때, 당시 신용카드 부실 축적 과정은 경기부양 목적의 저금리 기조, 신용카드 발급 및 카드 대출 관련 규제 완화 및 부동산시장 활황을 바탕으로 한 대출 규모 확대, 가계의 부채상환여력 악화 등 여러 면에서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유사점을 바탕으로 가계부채 부실이 현실화 될 경우 소비가 크게 침체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채무상환부담 증가가 가계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가계금융복지조사 복지부문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계 소비지출 증가율을 종속변수로, 원리금 상환부담 및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DSR이 5%p(대출금리가 3%p 상승할 경우) 상승 시 가계 소비지출 증가율이 0.11%p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하는 경우 가계 소비지출 증가율이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사점

첫째, 예대율 규제 및 충당금 적립율 조정 등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통해 과도한 대출확대를 방지하고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 공급시장 관리, 주택담보대출 및 집단대출 규제 강화 등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고정금리 대출 비중 및 원금 분할상환 비중을 확대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넷째, 부실위험이 높은 위험가구에 대한 채무조정 및 회생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다섯째, 중장기적으로 소비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계소득의 증가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1. 개 요

- **가계부채는 저금리와 부동산시장 호조를 바탕으로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며, 향후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대출 부실 우려가 증가**
- 가계부채는 저금리 지속에 따른 유동성 확대와 부동산시장 호조를 바탕으로 꾸준히 증가
 - 2014년 하반기에 시행된 LTV, DTI 규제완화와 부동산시장 호조, 낮은 금리 수준 등을 바탕으로 가계부채는 10%대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며 확대됨
 - 가계신용은 2016년 말 전년대비 11.7% 증가하여 1,344.3조원 수준임¹⁾
- **미국 정책금리 인상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증가**
 - 미국 경제 회복세가 지속됨에 따라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지난 3월 정책금리를 인상을 결정(2016년 5월 현재 0.75~1.00%)하였고, 향후 정책금리를 2019년 말 3%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1.25%로, 미국과의 정책금리차 축소로 인해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상황에서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의 채무상환부담 증가 및 소비 위축 가능성 존재**
 - 한국 기준금리는 동결중인 상황에서 미국 정책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국내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
 - 향후 국내 금리인상이 본격화될 경우 대출금리가 더 크게 상승할 것이며, 원리금상환부담이 증가하여 가계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가계 채무상환부담 상승이 가계지출 감소로 이어져 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존재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출금리 상승이 가계의 재무건전성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자료를 바탕으로 대출금리 상승 시 이자비용 상승으로 인한 가계의 평균 이자비용 및 채무상환부담 변화를 분석함
 - 2014~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이 가계 소비지출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1) 가계신용은 가계부채와 판매신용을 합한 값.

2. 가계부채 및 가계의 재무건전성 현황²⁾

○ 최근 가계부채는 비은행권³⁾ 대출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의 채무상환부담 가중 위험이 존재

- 최근 상대적으로 대출심사 기준이 낮고 금리수준이 높은 비은행권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확대

-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공격적인 대출확대와 2016년 2월부터 시행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으로 인한 은행권 대출심사 강화 등을 바탕으로 최근 가계부채는 비은행권 대출을 중심으로 확대됨
-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의 경우 예금은행 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출심사 기준이 낮고 대출조건이 나빠 가계부채 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경우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향후 대출금리 상승 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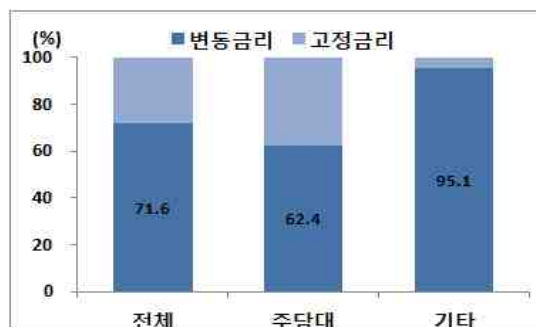
- 2016년 3/4분기 말 기준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71.6%이며, 비은행권 가계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은 은행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⁴⁾
- 가계부채에서 변동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대출금리 상승 시 이자상환액이 증가함에 따라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존재함

< 금융권별 가계부채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 변동금리 비중 >



자료 : 금융안정보고서.

- 주1) 2016년 3분기 말, 은행 가계대출 기준.
- 주 2) 기타대출은 주담대 외 신용대출, 비주담대 등.

2) 가계금융복지조사 중 금융부분 가구통합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3) 비은행 금융기관에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과 여신전문기관, 보험기관, 연금 등 기타금융기관이 포함.

4) 2016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고정금리로 분류된 주택담보대출 중 순수고정금리는 약 4.1%뿐이며 나머지의 경우 향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금리로 가계대출의 실제 변동금리 비중은 71.6%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

○ 가계 전체의 재무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이나, 부채5를 보유한 가구는 채무상환부담이 증가하는 추세

- 자산대비 부채총액 비율,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 등으로 평가한 가계의 평균 부채상환여력은 양호한 수준

- 전체가구의 부채상환여력은 자산대비 부채총액 비율(DTA) 18.2%,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DSR) 28.0%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임
-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경우 자산대비 부채 비율은 양호한 수준이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높은 편임

- 그러나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경우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DSR이 증가하며 채무상환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 부채가 감소한 가구 중 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한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이 87.2%로 대부분이 소득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음
-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자산대비 부채 비율은 크게 늘어나지 않은 반면 가처분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 및 DSR이 증가하는 추세임
- 소득에 비하여 부채가 더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채무부담이 늘어나 향후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상환부담이 커지며 가계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 가계의 재무건전성 현황 >

	실물 자산 /총자산	총부채 /총자산	금융 부채 /가처분 소득	원리금 상환액 /가처분 소득
전체	74.1	18.2	115.6	28.0
금융부채 보유가구	76.9	25.8	179.1	38.7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

< 금융부채 보유가구 부채상환능력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

5) 가계금융복지조사상 가구의 부채총액은 금융부채와 임대보증금의 합이며, 금융부채가 대출금리 상승 시 이자비용 상승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문제와 직결된 부분이므로 금융부채 및 금융부채 보유가구를 중심으로 분석.

○ 채무상환여력이 부족한 위험가구의 비중과 이들의 채무상환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대출금리 상승 시 이들을 중심으로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 존재

- 부채 보유가구 중 한계가구의 비중이 확대되고 이들의 원리금상환 부담이 증가하는 추세

- 한계가구는 순금융자산이 마이너스(-)이고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 비율(DSR)이 40% 이상인 가구로, 유동성 기준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 가구를 의미
- 금융부채 보유가구 중 한계가구가 차지하는 비중 및 원리금상환부담이 늘어나는 추세임
- 원리금상환부담이 증대될 경우 부채상환을 위해 실물자산을 처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실물시장으로 위험 전이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최근 고위험가구의 DSR이 크게 높아지는 등 부채상환여력이 악화되고 있어 향후 부실 가능성이 증가

- 고위험가구는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DTA)이 100%를 넘고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 비율(DSR)이 40% 이상인 가구로, 청산기준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 가구를 의미
-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을 모두 처분해도 부채를 모두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근 DSR이 크게 높아진 모습을 보여 금리 상승 충격 발생 시 채무 불이행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음

< 한계가구 부채상환능력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

< 고위험가구 부채상환능력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

3. 대출금리 상승이 가계 재무건전성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

1) 대출금리 상승 충격으로 인한 가계 재무건전성 악화

○ 대출금리 상승 시 금융부채 보유가구는 원리금상환부담이 증가하며 재무건전성이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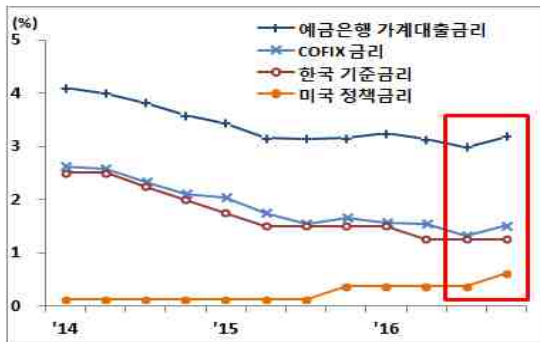
- 2016년 상태를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각각 1%p, 3%p 상승할 경우 부채보유가구 및 한계가구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⁶⁾

- 현재 상대적으로 금리수준 및 변동성이 높은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 기준금리 1%p 인상 시 대출금리가 최대 3%p 까지 상승할 수 있음을 가정⁷⁾
- 가구별 대출금리 관련 미시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가구별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은행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계산

-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재무건전성 및 부채상환여력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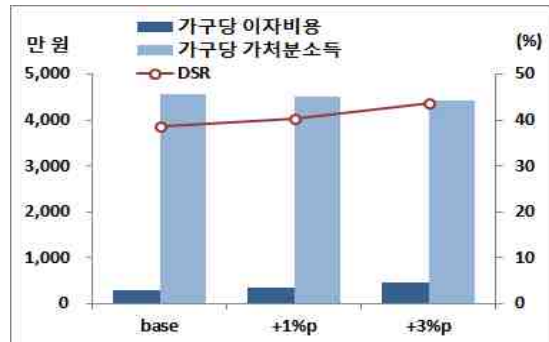
- 분석 결과 대출금리가 1%p, 3%p 상승할 경우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가구당 이자비용이 308만원에서 364만원, 476만원으로 증가하며, DSR은 38.7%에서 40.4%, 43.9%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원리금상환부담이 증가함과 동시에 이자비용 상승으로 인해 가처분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부채보유가구의 채무상환부담이 더욱 늘어남

< 기준금리 및 대출금리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FRB, 은행연합회.
주 : COFIX는 신규취급액 기준.

< 금융부채 보유가구 재무건전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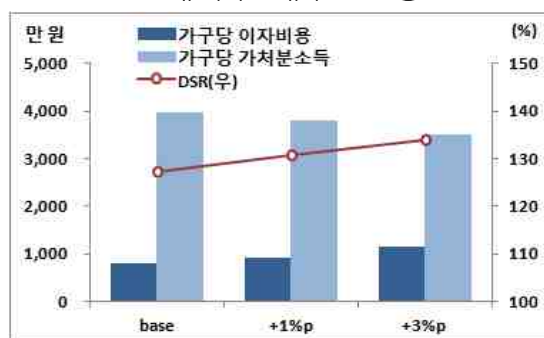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직접 계산.

-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금융부문 가구통합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으며, 자산, 부채총액 및 소득수준 변화 없이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비용 상승 및 그로 인한 가처분소득 변화만을 바탕으로 분석. 금리상승 외에 다른 상태는 변하지 않음을 가정하고, 이자비용 증가로 가처분소득이 음수가 되는 경우 가처분소득을 0으로 간주.
- 2016년 6월 한국 기준금리 인하 이후 저점에서 2016년 12월 미국 정책금리 인상 후 2017년 1월 예금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미 정책금리 인상폭(0.25%p)의 2배 가까이 상승(0.43%p), 저축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4배 가까이 상승(0.94%p).

○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한 가구를 중심으로 위험이 크게 증가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부실 현실화 및 실물시장으로의 위험 전이 가능성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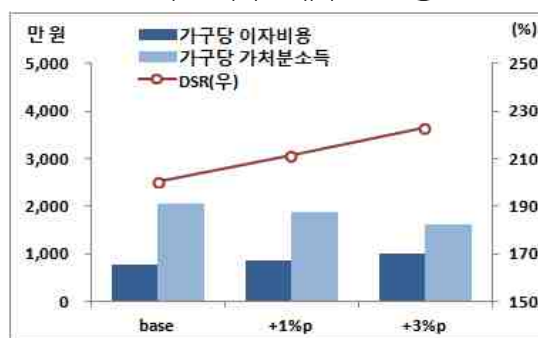
- 한계가구의 규모 증가 및 원리금상환 압력이 상승함에 따라 부채상환을 위한 실물자산 처분이 발생하는 경우 부동산시장으로 위험이 전가될 우려
 - 분석 결과 대출금리가 1%p, 3%p 상승할 경우 한계가구의 가구당 이자비용은 803만원에서 913만원, 1,135만원으로 증가, DSR은 127.3%에서 130.6%, 134.0%로 증가하며, 금융부채 보유가구 중 한계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5.8%에서 각각 16.8%, 19.5%로 늘어남⁸⁾
 - 원리금상환에 필요한 유동성이 부족해짐에 따라 단기간에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가구들로부터 원리금 연체 및 실물자산 처분 가능성이 높아짐
 - 실물자산 처분을 통한 디레버리징으로 인하여 주택가격 하락 압력이 커질 경우 부동산시장 불안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고위험가구의 부채상환여력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부실 촉발 가능성 증가
 - 분석 결과 대출금리가 1%p, 3%p 상승할 경우 고위험가구의 가구당 이자비용은 772만원에서 854만원, 999만원으로 증가, DSR은 200.5%에서 211.6%, 223.3%로 큰 폭으로 상승하며, 금융부채 보유가구 중 고위험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4%에서 각각 1.5%, 1.8%로 늘어남
 - 대출금리 상승 시 고위험가구의 원리금상환여력이 크게 악화되며, 이들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처하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 될 가능성이 있음

< 한계가구 재무건전성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직접 계산.

< 고위험가구 재무건전성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직접 계산.

8) 대출금리 상승 시 이자비용이 증가하고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면서 DSR이 증가하여 한계가구로 재분류되는 가구가 발생하면서 한계가구 비중이 증가하며, 새로 편입된 한계가구를 포함한 한계가구 전체의 이자비용 및 가처분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가구당 이자비용, 가구당 가처분소득 및 DSR을 계산.

2) 소비에 미치는 영향

○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채무상환부담 증가는 가계지출을 감소시키며,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될 경우 소비침체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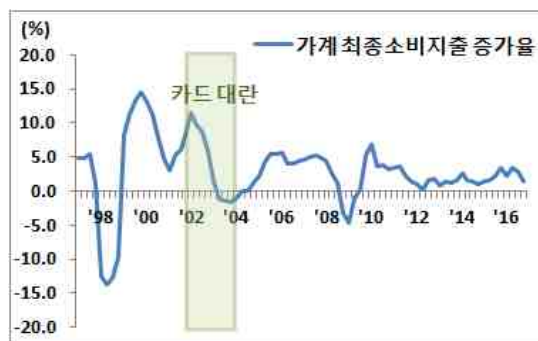
- 부채보유가구는 원리금상환부담 증가 시 소비지출을 축소할 가능성 존재
 - 부채보유가구 중 70.1%가 원리금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들 중 74.5%는 지출을 줄이고 있음
 -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해 이자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가계지출 감소로 이어져 소비를 둔화시킬 우려가 존재함
 - 또한 부채보유가구의 대부분이 소득으로 원리금을 상환하여 대출금리 상승으로 상환부담 증가 시 향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채무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 소비로 연결되지 못해 소비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가계 발 금융위기인 신용카드 부실사태와 비교할 때, 부실 축적과정에서의 유사점을 바탕으로 가계부채 부실 현실화 시 소비가 크게 침체될 가능성
 - 외환위기 이후 경기부양 목적으로 금리가 큰 폭으로 인하, 신용카드 발급 및 카드대출과 관련한 규제 완화로 대출이 급증하였고, 부동산시장 활황으로 인한 담보가치 상승 및 저금리를 바탕으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확대됨
 - 가계신용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며 가계의 부채상환여력이 악화됨
 - 1990년대 후반부터 가계 신용카드 대출이 급격히 팽창하며 축적된 부실이 2002년 말부터 연체율이 급증하며 부실이 폭발하면서 대규모 신용불량 및 큰 폭의 소비침체가 발생함

< 원리금상환부담에 따른 지출 감소 > (%)

		가계지출 감소 여부		
		줄이고 있음	줄이지 않음	계
원리금상환부담	부담 없음	0.0	29.9	29.9
	약간 부담	34.9	14.8	49.7
	매우 부담	17.3	3.1	20.4
	계	52.2	47.8	100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

< 신용카드 부실사태 당시 소비지출 >



자료 : 한국은행.
주 : 가계 최종소비지출, 전년 동기대비 증감율.

○ 채무상환부담 상승이 가계 소비에 미치는 영향 추정

-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가 가계의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가계금융복지조사 복지부문 자료를 이용⁹⁾
 - 기존연구¹⁰⁾를 참고하여 소비지출 증가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 설정
 - DSR 및 가계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설명변수로 하여 원리금 상환부담이 가계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 추정 결과 DSR이 5%p 상승할 경우 가계의 소비지출 증가율이 0.11%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계의 자산 및 소득 증가율 등은 소비지출 증가율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전기 DSR 1%p 상승 시 소비지출 증가율이 0.021%p 감소하여 원리금 상환부담 상승이 소비지출 증가율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 만기 일시상환 대출의 거치기간 종료 후 원금상환 직면 시, 원금 일시상환 대출을 분할상환으로 전환 시 등 DSR이 단기에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소비지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될 수 있음

<참고> 회귀분석 모형

-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가계금융복지조사 복지부문 가구자료를 이용
 - 자산,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등 명목변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실질화
 - 종속변수로 가계 소비지출 증가율을 이용
 - 설명변수로 가계의 자산(W), 가처분소득(Y), 자산대비 부채 비율(Lev), 원리금상환부담(DSR), 가구특성변수(가구주나이, 가구주나이제곱, 가구원수 및 동거여부, 소득변화기대), 연도더미를 이용
 - 레버리지 및 채무상환부담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의 시차를 고려하여 전년도 값을 이용
 - Lev, DSR의 이상치¹¹⁾를 제거한 후 추정
- $$\Delta C_t = \beta_0 + \beta_W \Delta W_t + \beta_Y \Delta Y_t + \beta_{Lev} Lev_{t-1} + \beta_{dsr} DSR_{t-1} + \gamma X_t + \beta_{year} D_{year} + \epsilon_t$$

9) 원리금상환액 자료가 제공되는 2014년부터 이용.

10) Dynan. 2012. "Is a Household Debt Overhang Holding Back Consumption?"

11) 평균값에서 표준편차*3 이상 떨어진 값을 이상치(outlier)로 분류.

4. 시사점

첫째, 예대율 규제 및 총당금 적립율 조정 등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통해 과도한 대출확대를 방지하고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 금융기관의 예대율 및 총당금 적립율 조정 등을 바탕으로 한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대 관리, 총량규제를 통한 총유동성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를 방지
- 제1금융권의 여신관리 강화로 제2금융권의 여신이 크게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완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 단, 비은행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되 시장에 과도한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진적인 시행이 필요함

둘째,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 공급시장 관리, 주택담보대출 및 집단대출 규제 강화 등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 가계부채 증가세는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한 대출규제 완화 및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바탕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히 증가한 데 기인
- 주택 공급시장 관리, 주택담보대출 및 집단대출 규제 강화 등을 바탕으로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투기적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가계부채의 급속한 증가속도를 안정시킬 필요
 - 다만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를 급격히 강화할 경우 주택시장 하방리스크 증가 및 실물경기 악화 가능성이 있어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과열 지역부터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함

셋째, 고정금리 대출 비중 및 원금 분할상환 비중을 확대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고 변동금리 대출의 고정금리 전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 채무상환부담 문제를 완화

- 원금 분할상환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부채의 건전성을 개선하고 만기 일시상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채무불이행 위험을 축소
 - 분할상환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원리금상환부담이 큰 채무자의 경우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엄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대출심사를 강화하여 적격한 상환능력을 보유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과잉 대출을 방지

넷째, 부실위험이 높은 위험가구에 대한 채무조정 및 회생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 채무상환부담 증가로 위험가구의 채무불이행이 늘어날 경우 가계의 부실이 실물시장으로 전이되고 경제 전반에 걸친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
- 원리금상환 연체 및 채무불이행 상태에 처한 부실가구가 재활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 연장, 채무감면 등 채무조정제도를 강화함으로써 부실가구의 채무부담 완화 및 신용회복을 지원하여 회생 기회를 확대
 - 다만 채무자의 상환의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함

다섯째, 중장기적으로 소비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계소득의 증가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비용 증가, 거치기간 종료에 따른 원금상환부담 본격화 등으로 인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 상승이 소비지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
- 적극적인 고용시장 정책을 바탕으로 소비여력을 갖춘 계층을 확대,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등 가계 소득 증대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및 소비여력을 높여 부실 위험을 축소 **HRI**

신유란 연구원 (2072-6240, yooran0111@hri.co.kr)